

긴급조치9호 첩폐투쟁 30주년 기념학술토론회

- 주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긴급조치9호 첩폐투쟁 30주년 기념행사추진위원회
- 일시 : 2005년 5월 13일(금) 오후3시
- 장소 :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 (19층)

1. 내용의 일부 혹은 전체를 인용, 발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저자와 출처를 밝혀 주셔야 합니다.
2. 본 자료는 <http://www.kdemocracy.or.kr/KDFOMS/>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민 주 화 운 동

당신이 만든 우리의 희망입니다

민주주의 발전과 통일한국의 미래.
대한민국의 저력을 이야기 할 때마다
민주화운동의 소중한 경험과 정신을
힘주어 들려주십시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우리들의 소중한 뜻이 펼쳐지도록
국민들과 함께 새로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서울시 중구 정동 34-5 배재정동빌딩 1-3층
전화 02-3709-7500 팩스 02-3709-7530
<http://www.kdemocracy.or.kr/>

긴급조치 9호 시기 학생운동의 역사적 위상과 의의

정 태 현(고려대 교수, 한국사)

1. 머리말 - 긴급조치 9호 시기의 학생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2. 자리매김을 위한 前史 정리
 - 1)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 성장을 이끈 앞 세대의 불연속적 학생운동
 - 2) 탄압과 체제내화 정책 속에 성장한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
 - 3) 야만의 '색깔론' 조작과 폭압의 완결-긴급조치 9호
3. 긴급조치 9호 세대의 고유한 특징
 - 1) 공고해진 운동 조직과 자기희생적 헌신성
 - 2) 조직적, 이념적 범주의 민주성 체화-전업활동(운동)가로의 이전 모색
 - 3) 지지와 냉소의 복합적 대상- '소수자' 의 새로운 대학문화 창출
 - 4) 대변화의 밑알이 된 투쟁- '서울의 봄' 과 '광주'
4. 맺음말 - 386 세대의 밑발 터전을 마련한 긴급조치 9호 세대

1. 머리말 - 긴급조치 9호 시기의 학생운동을 기억해야 하는 이유

해방 후 1980년대 중반까지 40여 년 동안 시민적, 민주적 토대가 취약했던 한국 사회의 민주화운동 선봉에서 온갖 희생을 무릅쓴 채 사회 모순을 파헤치고 문제제기를 한 핵심세력은 학생운동이었다. 1980년대 중후반 이후 노동운동을 비롯하여 각 분야의 사회운동이 활성화된 것도 학생운동 출신들이 사회로 진출하여 전문 활동가로 나서면서 가능해진 것이었다. 이 점은 한국 민주화운동의 큰 특징이기도 하다.

1975년 5월 13일에 발포된 대통령 긴급조치 9호(이하 긴조 9호)는 1979년 말 까지 5년 가까이 지속된 악법으로서 기존에 발포된 긴급조치의 '미비점' 을 보완한 독재체제 구축과 저항세력 탄압을 위한 완결판이었다. 긴조 9호 시기는 학내에서 자치기구인 총학생회는 물론, 대부분의 학술씨클 및 봉사씨클이나 종교씨클마저 해체되는 암흑기였다. 이 시기는 '막걸리 긴급조치' 라 불릴 정도로 말 한마디로 트집 잡혀 구속 또는 검거되는 등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이었지

만 학생운동은 오히려 더욱 치열하게 전개되었다.

한국 학생운동사, 나아가서 민주화운동사를 돌아 볼 때, 긴조 9호 시기의 학생운동은 독특한 의미와 역사적 위상을 지니고 있다. 긴조 9호 세대는 학교를 떠난 이후 사회 각 부문운동으로 이전하여 학생운동 과정에서 다진 개혁-변혁의 이상을 집단적, 조직적, 이념적으로 실천하기 시작한 첫 세대였다. 이는 우리 사회에 일정한 운동론과 조직론에 입각한 새로운 운동 세대가 범주적으로 출현한 것을 의미했다. 그런 점에서 긴조 9호 세대는 4.19 세대, 6.3 세대, 민청 세대 등 개별사건으로 통칭되는 앞 세대와 뚜렷하게 다른 고유한 운동문화를 발전시킨 세대였다.

그러나 긴조 9호 세대는 적지 않은 한계도 함께 지닌 세대였다. 이들은 긴조 9호가 강요한 비합법적 지하 공간이 활동의 주무대였던 데다가 언론보도조차 금지되었기 때문에 일반 국민들로부터 소외된 상태에서 '고독하게' 싸운 존재였다. 앞뒤의 다른 세대들과 달리 운동세대를 상징하기도 하는 '스타'가 '만들어질' 수 없는 환경에서 '승리감'에 대한 막연한 기대조차 먼 훗날 일로 접어든 채 비밀리에 어렵게 당면 과제를 수행하기에 급급했던 세대였다. 학생운동 인자들 사이의 공통된 이념도 거대한 힘을 구축하면서 전국적 학생운동조직을 결성한 1980년대처럼 뚜렷하지 않았다.

이처럼 고유한 의의와 상황에 따른 한계를 드러냈던 긴조 9호 시기의 학생운동에 대해서는 시대적 맥락 속에서 체계적인 역사적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긴조 9호 시기를 포함한 1970년대 학생운동에 대한 기존 시각이나 관련 연구를 보면 관성적으로 1970년대 초반의 경우는 1960년대의 연장선에서, 1970년대 후반의 경우는 1980년대 운동의 前史로 취급되면서 과도기로 치부되면서 단편적으로 언급되는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여기에는 후대의 연구자들이 이 시기 운동을 연구대상으로 설정하는데 요구되는 일차 자료를 보기 어려운 기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도자료 하나 남아 있는 것이 없고, 정보기관의 감시와 검거를 피하기 위해 모든 기록이나 문건은 갖고 있지 않는 것이 당시 학생운동 인자들의 상식이었기 때문이다. 이는 당시 상황의 산물이었던 만큼 그에 대한 평가 역시 상황에 조응하여 객관적이고 역사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돌이켜 보면 이 시기의 학생운동은 지금의 젊은 세대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도서관 열람실 안에까지 형사들이 앉아 학생들을 감시하는 기막힐 정도로 한심스럽고 험난했던 시기에 전개된 것이었다. 이 세대는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의 제고라는 한국 근현대사의 과제를 체계적으로 세워가면서 이념적, 조직적 학생운동의 서막을 연 밀알 세대였다. 동시에 유신헌법 철폐, 학원자율화

보장, 대외종속 배격, 민중생존권 보장, 사회부조리 척결 등 이 시기 학생운동의 주요 주장은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개혁을 총체적으로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학생운동 인자들이 헌신성을 갖추고 일정한 운동논리를 구축한 가운데 한국 민주화운동의 근간인 민주·민중·민족 개념을 정립하게 된 것도 긴조 9호 세대에 이르러서였다.

2. 자리매김을 위한 前史 정리

1)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 성장을 이끈 앞 세대의 불연속적 학생운동
 분단국가 체제는 치열한 민족해방운동을 통해 발전되어 오던 '민' 의식을 계승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조건으로 작용했다. '국민'은 권리와 의무의 주체였다기보다 분단국가의 동원·통제 대상으로서, 특히 전쟁 전후 시기에는 '국민' - '비국민' 사이의 생명이 걸린 살벌한 양자택일적 분위기에서 분단국가의 한 쪽에 살고 있는 '거민'에 불과했다. '거민'들이 비자발적으로 또는 자발적으로 분단국가주의에 적극 편입되는 메카니즘이 고착되면서 사회 내부의 계급적·계층적·사상적 차이를 인정하고 수용하는 개념으로서의 '국민'으로 거듭나기까지는 지난한 과정을 거쳐야 했다.

분단국가권력이 '거민'을 일방적으로 지배, 통제, 동원하는 와중에서도 민족해방운동과 통일국가수립운동의 역사적 자산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는 휴전 후 3년만인 1956년 정부통령 선거에서 적대적 반복적 북진통일론을 반대하는 평화통일론이 높은 지지를 받은 상황에서 반증된다. 붓물이 터지기 시작한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은 4.19를 전후하여 급격하게 확산되어 갔다. 오랜 민주화투쟁 속에서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이 성장한 결과, 1980년대에 이르면 민주화운동 논리로서 민족·민주·민중 개념이 정립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추진력이자 민주화운동을 이끌어간 주축세력은 역시 학생들이었다. 근현대사를 지나는 동안 국가의 보호를 받은 경험이 희박한 '거민'들의 유일한 탈출구는 '우골탑'이라고 불린 폭발적인 교육열로 나타난 개인적 가족적 성공 추구였다. 이에 따라 급증한 학생층은 합리적이고 열린사회, 즉 민주화를 요구했다. 특히 대학생들은 때에 따라 엘리트 의식으로, 때에 따라서는 선각자적 사명감을 갖고 사회민주화에 대한 강한 열망을 표시했다. 1950년대 말 이후 4.19 민주항쟁을 지나 1970년대 전반기까지 학생운동의 특징은 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 제도마저 무시하며 부패한 독재정권에 대한 투쟁이었다.

5.16 쿠데타 이후 유신체제 성립 이전까지 학생운동의 큰 특징은 한일협정반

대, 3선개헌반대, 교련반대투쟁 등 그때마다 정치적 이슈가 되는 문제를 사회화 하면서 운동 역량을 집중했다는 점이다. 연속적, 조직적, 이념적이었기보다 당면 정치문제에 대한 이슈 파이팅 성격이 강했다. 특히 6·3 항쟁은 군사정권 수립 이후 위축되어 있던 학생운동이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시발점으로서 대일굴욕외교반대에서 군사정권에 대한 비판으로 확산되어 민주화 운동의 국민적 지지와 공감대를 넓히는 계기가 되었다.

그러나 미국과 일본의 동북아정책이나 한미, 한일 관계를 체계적으로 인식한 것은 아니었다. 군사정권의 민족적 민주주의 허구성을 폭로하면서 국민 일반의 정서적 반일의식에 기반하고 있었다. 반면에 같은 시기 커다란 사회 의제였던 월남파병에 대해서는 소극적 비판 또는 근시안적 국익 관점에서 인식하고 있었다. 즉 국가권력의 대외종속성과 폐쇄적 민족주의, 나아가서 박정권이 정략적 차원에서 선전한 민족적 민주주의의 실체까지 직시하지는 못했다. 학생운동의 이러한 한계는 6·3 항쟁 이후 소강상태에 빠지는 원인이기도 했다. 이후 학생운동은 1967년 대선과 총선 부정선거, 장기집권의 서막으로 박정권이 강행한 1969년 3선개헌, 1971년 교련반대투쟁 등을 계기로 불연속적으로 활성화되었다.

대안권력이 될 수 없는 학생들이 민주화운동을 주도하고 1980년대까지 강한 정치세력으로 존재한 것은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억압에 저항하는 세력이 다양하게 형성되지 못한 때문이었다. 다른 한편 학생운동 인자들이 학원을 떠난 후 운동적 의식을 사회생활 속에서 집단적이고 지속적으로 투영하지 못한 채, 학생 시절의 정의감 발로 범주 이상을 넘어선 모색을 하지 못했음을 반영한다. 학생운동 인자들이 집단적, 조직적으로 각 분야의 사회운동 인자로 이전하면서 전문 활동가들이 주축을 이루는 각 영역운동이 형성된 것은 범주적으로 볼 때, 1970년대 중후반에 대학을 다녔던 긴조 9호 세대에 이르러서였다.

2) 탄압과 체제내화 정책 속에 성장한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의 확산은 이에 대응한 지배정책의 변화, 즉 경제개발정책을 요구했다. 극우 반공논리에만 의존하여 국민을 '거민'으로서 통제·동원 대상으로 설정한 원색적 테러정치 수준만으로 정권 유지가 어려워졌을 때, 이승만 정권은 '산업개발 3개년계획'을 입안했다. 이 계획안을 실행에 옮긴 장면 정권의 '경제개발 5개년계획 수립요강'은 '거민' 수준을 벗어나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이 확산되는 분위기에 조용한 것이었다. 5.16 군사정권은 '민주적·민족적 국민' 인식의 확산에 대해 철저한 탄압과 아울러 이러한 인식의 진취적 욕구를 산업노동력으로 흡수하여 체제내화하는 양면정책

을 펼쳤다. 즉 '의식'의 발전을 '생활' 향상을 통해 묶는 통치방식을 취한 것이다.

한편 1950년대 중반을 지나 4·19를 계기로 확산되어 가던 평화통일운동 분위기는 5·16 쿠데타 세력의 대탄압에 직면하게 되었다. 민족일보 사장 조용수에 대한 전격적 사형 집행에서 드러나듯이, 특히 '민족적 국민' 의식은 철저한 탄압 속에 위축되었고 이러한 상황은 1970년대 전반기까지 지속되었다. 여기에는 경제개발의 가시적 성과가 분단국가체제에 안주하는 분위기 형성에 일조하고 있었다. 1970년대 중반 '분단시대의 역사학'의 제창은 우리 사회의 이러한 보수화 현상에 대한 경고였다.

그러나 군사정부의 억압 속에서도 '민족적 국민' 의식은 가라앉으면서도 내재적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었다. 북진통일론-적대적 상호부정에서 벗어나 적대적 공존체제로, 나아가서 이후 평화적 공존체제로 전화하는 디딤돌이 된 1972년 7·4 남북공동성명의 배경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유신정권이 통일논의를 내부 정치에 이용해야 할 정도로 '민족적 국민' 의식의 잠재력이 컸다는 점이다. 1972년 12월 말 유신헌법 찬반투표에서 유신정권은 유신헌법에 반대하면 남북통일을 반대하는 것이라고 대대적으로 선전한 것도 이때문이었다. 역사적으로 볼 때, 7·4 공동성명은 '민족적 국민' 의식의 잠재력을 반영한 것이었고, 정권의 의도와 달리 결과적으로 '민족적 국민' 의식이 확산되는데 기여했다.

1970년대까지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은 성장하면서도 지배정책의 양면정책-일면 탄압, 일면 흡수-에 제약을 받고 있었다. 이 때문에 시대적 흐름을 타던 민주화 추세는 일시 후퇴되면서 군사정권의 "잘 살아 보세" 구호에 일면 흡수되는 양상을 드러냈다. 대통령 긴급조치가 남발되는 폭정에 저항하는 민주화운동 세력은 지식인, 종교인, 언론인 등으로 오히려 확대되었지만, 노동운동이나 농민운동의 경우에는 반공논리의 규정력이 유달리 크게 작용함으로써 침체 현상을 보인 것도 이와 궤를 같이 한다.

일각에서는 박정희의 리더십에 초점을 두어 집중 조명하기도 한다. 물론 1950~60년대 북한의 '성공적' 전후복구 경험과 마찬가지로 1960~70년대 남한의 병영식 동원체제는 경제성장에 일시적으로 효과를 드러냈다. 그러나 지도력과 비능률적인 독재는 질적으로 다를 뿐 아니라, '개발독재'가 경제성장에 효율적이라는 주장도 증명된 바가 없다. 오히려 하향식 동원과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전제로, 정경유착의 부패 속에서 재벌에 특혜를 부여하는 성장 방식은 지속적인 효율성을 가질 수 없었다.

1970년대까지의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의 한계는 자본축적 방식에 그

대로 반영되었다. 즉 전쟁 과정에서 '학습' 된 대북 적대감, 낮은 권리의식, 노동운동의 척박함을 바탕으로 한 자본축적 방식은 일방적인 노동탄압과 저임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수준에 머물렀다. "북괴의 남침위협론"과 "먼저 파이를 키워야 한다"는 지배논리가 당시 사회에서 일정하게 수용된 것은 낮은 생산력 수준과 어우러진 이데올로기적 강요에 휘둘렸던 한국 사회의 민주화 정도를 반영하는 것이었다. 파이가 있어야 분배도 가능하다는 경제성장론의 민주화운동 탄압 논리는 오히려 생산력 발전을 구속하는 작위적이고 저차원적인 독재논리였다. 박정희 시대는 식민지적 근대의 질곡을 안은 가운데 경제성장 논리로 기득권을 유지강화하려던 세력과 이를 극복하고자 하는 세력 사이에 본격적인 충돌이 전개된 시기였다.

3) 야만의 '색깔론' 조작과 폭압의 완결-긴급조치 9호

유신체제 들어 학생운동 인자들은 원시적 폭력정치의 환경 하에서 경제성장정책과 자본 위주의 근대화 논리에 대한 근본적 비판의식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비조직적 당면 이슈 투쟁 위주의 운동을 검토하는 분위기가 일어나고 이념서를 조직을 통해 자체학습과 일정한 이념적 지향성을 모색하기 시작했다. 과시즘적 전체주의 유신체제를 겪으면서 오히려 민주화운동 주체와 범주가 확대되어 민주화운동의 대중적 지지기반, '민주적 민족적 국민'의 외연도 넓어졌다. 이러한 배경에서 유신헌법 개헌 서명운동이 광범위하게 일어났고 유신정권은 1974년 1월 8일 긴급조치 1호 발포로 이에 철퇴를 가하면서 긴급조치에 의존한 폭압정치의 서막을 열었다.

특히 유신정권은 긴급조치 발포를 전후하여 학생운동에 대해, 이전까지 시도하지 않았던 '색깔론' 씌우기 공작을 통한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다. 먼저 1973년에 고려대 민우지 사건과 검은 10월단 사건으로 불리기도 했던 야생화지 사건을 발표함으로써 민주화운동이 '북괴'와 내통했다는 마타도어로 사회분위기를 공포로 몰아넣었다. 1974년에는 개별 대학 차원의 운동을 극복하고 통일적 조직을 꾀했던 '전국민주청년학생연맹'과 인혁당 사건을 연계하는 긴급조치 4호를 발포했다. 그리고 단일 학교(고려대) 휴교를 위한 긴급조치 7호 발포 이튿날인 1975년 4월 9일에 인혁당 관련자 8명에 대한 사형을 전격 집행하는 야만성을 드러냈다. 이를 후인 4월 11일에는 서울농대생 김상진이 자결로써 유신정권에 저항했다. 권력의 야만과 저항의 자결투쟁으로 점철된 유신헌법 발포 이후 2~3년간은 비극의 연속이었다.

악몽의 1975년 4월이 지나자마자 유신정권은 5월 13일 긴급조치 완결판으로서 긴조 9호를 발포했다. 민주주의가 갖춰야 할 최소한의 형식조차 완전히 부정

한 암흑의 시대가 도래했다. 유신헌법 제53조에 명기된 대통령 긴급조치권은 3권 분립 자체를 부정한 채 대통령의 무한권력을 규정한 것으로서 1호 발포 이래 불과 1년 4개월 만에 9호까지 연이어 발포되었다. 즉 유신체제 유지를 위한 '항상조치'로서 유신헌법에 대한 부정, 반대, 개정 논의를 일체 금지하고, 긴급조치 비방이나 이를 위한 사실에 대한 보도 금지 규정에 더해 긴조 9호는 학생의 집단적 정치활동을 금지하고 '혐의자'는 언제든지 법관의 영장 없이도 체포, 구속, 압수,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유신헌법을 따르더라도 위헌적이고 폭력적인 긴급조치는 전두환 군사정권 시기에 집시법으로 대체될 때까지 1,370명의 위반자, 1,050명에 이르는 구속자를 낳고서야 폐지되었다.

긴조 9호 시기에도 민주화운동은 학생운동이 중심 역할을 계속 수행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긴조 9호는 학생운동의 환경 변화-악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이를 타개하려는 학생운동 인자들의 활동 역시 앞 세대와 큰 차이를 드러냈다. 이러한 차이는 긴조 9호 세대 학생운동의 변화와 고유한 특징의 발현을 의미함과 동시에 그에 따른 한계를 함께 내포한 것이었다.

3. 긴급조치 9호 세대의 고유한 특징

1) 공고해진 운동 조직과 헌신성, 그리고 '서울의 봄' 과 '광주'

민주주의적 절차를 송두리째 부정한 유신헌법의 민주화운동 탄압은 원시적일 정도로 노골적이었다. 그러나 긴조 9호 아래에서 학생운동의 조직은 오히려 공고해졌고 실천 자세나 의지도 더욱 철저해졌다. 억압 상황과 어우러져 주체의 보다 강해진 전투성은 앞 세대 학생운동 양상과 큰 차이로 나타났고 새로운 학생운동 문화를 창출했다.

긴조 9호 규정에 따라 대부분의 씨클이 해체되었고 민청학련 세대 때까지 유지되었던 총학생회라는 공개적 학내 조직을 통한 합법적 공간에서의 모든 학내 활동은 불가능해졌다. 최악의 환경에 둘러싸인 학생운동이 일시 위축되는 것은 불가피한 일이었다. 학내에서도 모든 활동은 산발적으로 비밀리에 지하조직을 통해 이루어져야 했다. 따라서 아무리 조심하더라도 보안 유지에 아마추어일 수밖에 없는 학생들에게는 너무나 버거운 환경이었다. 그만큼 운동의 효율성이 떨어졌고 대중화에도 결정적인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상황에 조응하여 각 대학에서는 유신체제에 항거하는 다양한 투쟁방식이 나타나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지하씨클 인자들 중심으로 동료 학생들과 함께 시위를 벌이고 비밀리에 유인물이 살포되었다. 새로운 방식으로 민주화운동 소식을 담은 지하신문을 제작하여 일반 학생들에게 우송 배포하는가

하면 교정 곳곳에 반유신 구호가 쓰여졌다. 그리고 살벌한 분위기 하에서도 1978년 6월 광화문 시위처럼 도심 한 복판에서 각 대학의 연합시위가 밤늦도록 전개되기도 했다.

긴조 9호 아래에서 학생운동이 활발하게, 그리고 오히려 지속적으로 전개될 수 있었던 것은 그럴만한 이유가 있었다. 먼저 탄압과 검거를 피하기 위해 각종 형태의 반합법 비합법 소그룹이나 씨클조직을 근간으로 역사, 사회과학 등에 대한 자체학습 시스템이 만들어지면서 조직적인 투쟁 대오가 형성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분산된 씨클이나 소그룹 간에 협의체를 통해 제한적 수준에서나마 운동을 기획하는 조직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생운동 인자들이 체계적으로 재생산되면서 민주화투쟁을 주도하는 역량을 키워 간 것이다. 또 최악의 환경에서 지속적으로 운동 조직을 확보하기 위해 교회 등 학교 밖 공개기구를 활용하면서 학습 활동과 실천을 모색하기도 했다.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학원이 극도로 억압된 상황에서 교외 조직 역시 학생운동권의 재생산을 보충하는 역할을 했고 기도회, 강연회 등도 민주화운동을 널리 선전하고 반정부투쟁을 고취하는 장으로 활용되었다.

이에 따라 긴조 9호 시기 들어 학생운동은 당면 문제를 사회적으로 이슈화하는 투쟁방식 단계에 머물러 있던 앞 세대와 달리 연속성, 기획성을 갖고 전개되기 시작했다. 1980년대 들어 사용되었던 운동권 개념으로 칭할 수 있는 조직과 집단이 대학가에 범주적으로 뚜렷하게 존재하기 시작한 것은 긴조 9호 세대부터였다. 학생운동 인자들의 정치의식도 앞 세대에 비해 질적 변화를 띠었고 목적의식적 조직화를 모색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조직을 통해 학생운동 인자들은 환경 악화에 비례하여 더욱 강고한 운동성과 투철한 헌신성을 단련해갔다.

학생운동사를 돌아 볼 때, 긴조 9호 세대는 인자들의 헌신성, 집단적 공동체 의식, 조직 관념이 두드러진 특징을 보였다. 이들은 이렇게 획득한 정서와 사회 인식을 바탕으로 권력지향적인 것을 거부하고 권력에 대한 저항과 이에 필요한 활동을 추구했다. 이는 탄압에 주목적이 있던 정권의 본래 의도와 달리 '스타성 인물'이 '만들어졌던' 앞 세대의 경우 명망성이 있는 인자들이 개별적 차원에서 제도정치권에 흡수되기도 한 것과 또 다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긴조 9호 시기 학생운동 인자들은 탄압에 맞서 더욱 공고해진 조직을 꾸리고 자기희생적 헌신성을 체득함으로써 이 시기 들어 유신정권이 본격적으로 선전하던 두 개의 짐에 제대로 대응할 수 있었다. 즉 민주화운동이 '북괴의 남침 야욕'에 부합하는 행위라는 전통적 색깔론과 경제성장을 가로 막는 행위라는 개별 위주 경제정책에 논리적, 실천적으로 저항하면서 정체성에 조용하는 고유한 학생운동 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었다. 이러한 분투가 결국 유신의 조종을 울린

부·마항쟁으로 이어졌다. 이 상황은 대처방식을 놓고 박정권 내부를 강온파로 분열시켰고 결국 중앙정보부장이 대통령을 살해한 가운데 유신시대도 막을 내렸다.

2) 조직적, 이념적 범주의 민중성 체화-전업활동(운동)가로의 이전 모색

긴조 9호 세대는 각종 반합법 비합법 씨클 내에서 만든 자체의 학습 프로그램을 통해 조직적, 이념적으로 민중성을 체화하면서 제적·구속으로 학원을 떠나거나 졸업에 즈음해서 '현장'으로의 이전을 실천적으로 모색한 첫 세대였다. 앞 세대가 학생운동 인자의 꾸준한 재생산과 학교를 떠난 후 비슷한 지향점을 가진 운동세력으로서의 집단화 모색이 느슨했고 기층민중에 대한 인식이 정서적 수준에 머물렀던 것에 비하면, 긴조 9호 세대는 이러한 한계를 넘어서는 질적 변화를 보인 것이다.

1970년 말 전태일 분신사건은 당시의 학생들이 노동문제에 대한 심각한 문제 의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다. 긴조 9호 세대는 민주주의 정착을 위해 분단문제와 함께 노동자·농민문제를 함께 해결해야 할 핵심 과제로 인식했다. 한국사회와 역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뚜렷한 세계관을 세우려는 모색이 계속되었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 인자들 가운데 상당수가 학교 밖 활동의 일환으로 노동야학이나 농촌활동을 통해 민중과 유대를 다지면서 이들의 실상과 의식을 접했다.

실제로 이 시기 학생들의 시위나 살포된 유인물에는 노동자나 농민의 생존권 투쟁을 알리고 민중의 고통에 동참하려는 의지를 담은 내용이 어김없이 포함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독재정권의 부정부패와 왜곡된 성장정책에서 비롯된 것으로 비판했다. 즉 당면한 정치쟁점 중심으로 투쟁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연속적 과제로서 그리고 민족적·민중적 관점에서 유신독재를 비판한 것이다. 반외세 민족주의적 인식, 노동·농민 문제에 대한 천착을 통해 '민주적·민족적 국민' 의식에 기반한 반독재투쟁의 내용도 변혁적 의미로 발전했다.

긴조 9호 세대는 폭압정치로 사회운동 전반이 침체된 상황에서 민주화투쟁을 선도해 온 학생운동이 더욱 치열한 정치투쟁을 통해 민중을 의식화하고 투쟁에 나서게 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러한 선도적 정치투쟁론과 함께 변혁운동 주체를 기층민중-노동자계급으로 인식하고 노동야학 교사로 활동하고 노동현장에서 노동대중과 만나면서 노동대중의 의식화, 조직화가 변혁운동의 일차적 과제라고 인식하는 그룹도 형성되었다. 또 산업선교회, 가톨릭농민회 등 종교조직을 통해 노동·농민의 처지를 인식하고 이들의 운동과 결합하려고 시도했다.

학생운동 인자들의 민중성 체화 시도는 체계적인 사회과학 학습 진행으로 이어지고 조직적으로 현장 이전을 모색하는 단계로 나아갔다. 그리고 다양한 형태

의 비합법 비공개 조직을 통해 전위핵심 육성 강화가 절실하다는 입장에서 '현장론'을 정립해가기 시작했다. 그러나 노동 현장으로 이전하는 그룹은 1970년대 후반기까지만 해도 아직 소수였다. 또 경험 기간이 일천하여 노동계급에 대한 이해나 노동운동 방법론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단계에 이르지 못했다. 현장운동의 실천적 전형을 창출할 단계에 이르지도 못했다. 그러나 이러한 모색이 확산되어 1980년대 들어 학생운동에서 노동운동 또는 농민운동 영역으로의 이전이 보편화되고 1987년 노동자대투쟁의 산파 역할을 하게 되었다.

한편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활발하게 진행된 농촌봉사활동도 긴조 9호 시대에 계는 학생운동 실천의 중요한 영역으로서, 민중성 체화의 중요한 장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일제 하에서부터 시작된 학생들의 농촌활동은 4·19 이후 국민계몽운동으로 재개된 이후 1970년대에는 새마을운동 실시와 함께 당국 지원 하에 진행되었고 문교부는 농어촌 봉사활동을 선택과목으로 권장했다.

긴조 9호 세대는 이러한 농촌활동이 일회적 봉사활동에 그쳤다고 비판하고 농촌과의 항상적인 연계를 통해 구조적으로 농촌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인식했다. 이에 따라 학생운동의 이념적 발전과 맞물려 농촌활동 성격도 질적인 변화를 보게 되었다. 농촌활동을 농촌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인식과 민중성 체화의 훈련 계기로 삼기 시작한 것이다. 학생운동 인자들에게 농촌활동은 현장 문제를 직접 겪으면서 향후 자신이 이전할 터전을 모색하는 훈련의 장이 된 것이다.

3) 지지와 냉소의 복합적 대상- '소수자'의 새로운 대학문화 창출

학생운동 인자들 사이에 공고해진 운동 조직과 헌신성, 그리고 조직적이고 이념적 범주로 민중성 체화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가운데, 긴조 9호 시기 학생운동의 기본 흐름은 1960년대 이래의 맥락을 이은 반독재 민주화투쟁이었다. 학원 자유, 언론 자유, 어용교수 퇴진 등 기초적인 민주주의적 질서 회복을 주장하는 구호가 강한 힘을 발휘하고 있었다. "유신철폐, 독재타도"로 대표되는 당시의 주요 구호는 절차적 민주주의 쟁취에 중점을 둔 것이었다. 이러한 주장은 일반 학생들에게 호소력을 얻고 심정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

동시에 긴조 9호라는 상황은 학생운동 인자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에 일정한 간극을 만들어 놓았다. 양자 사이에는 폭압 체제에서 비롯된 현실적인 투쟁력과 경험의 차이,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한 시대인식과 이념의 차이, 상호 모순 되면서도 공존하는 이중적 문화가 존재했다. 실제로 당시 대학가에 엇갈리는 두 흐름의 문화가 공존했다.

하나는 긴조 9호 시기에 두드러지기 시작한 대학문화의 정치화 현상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기조에서 사물놀이, 농악, 판화 등 민중문화 장르와 형식들이 대학 문화의 정치적 운동 영역으로서 중요한 흐름으로 자리 잡았다. 이 무렵 교정에는 현실비판과 미래를 위한 몸짓을 추동하는 풍물패들의 장단이 가득 차 있었다.

반면에 수도권 인구집중과 개발에 따라 쾌락과 상품의 소비시장으로서의 대학 문화도 뚜렷하게 존재했다. 각 대학 축제에서는 비슷한 유형의 쌍쌍파티가 정형화되었고 학생운동 그룹이나 독서 그룹이 주도하는 학술, 문화행사는 상대적으로 위축되었다. 체념과 울분 속에서 형성된 낭만적이고 개인적인 대학문화의 파도가 엘리트로서의 비판적 사회의식과 학문적 탐구욕과 발전적으로 융화되지 못한 것이다. 물론 전체 사회의 지적, 문화적 수준이 열악한 상황에서 대학생들에게만 이를 뛰어넘는 문화를 요구하기에 우리의 대학 역사는 너무 짧았고 정치 사회적 환경 또한 너무나 폭압적이고 열악했다.

상징적 비유를 한다면, 이 시기 대학가에는 극단적인 억압체제를 수용하거나 그에 대한 비판 의지 자체를 포기한 가운데 “학교는 본적지이며 다방과 당구장이 현주소” 이고 교정에서 버젓이 카드놀이를 하는 ‘날라리’와 ‘운동권’이 공존하고 있었다. 즉 원시적 폭압체제 환경은 대학문화를 이중적이고 단층적으로 만들었다. 그리고 학생운동 인자들이 일반 학생들에게 동조의 대상임과 동시에 냉소의 대상으로 바라보게 하는 이중적 시각을 만들었다.

이러한 이중적 대학문화 속에는 집단적 행동에는 나서지 못하지만 개별적 차원의 저항문화가 쉽게 공감대를 얻을 수 있는 분위기가 수반되었다. 긴조 9호는 토론할 때는 분노하지만 행동이 따라가지 못하는 ‘다방 민족주의자’ 또는 ‘다방 투사’ 들을 양산하는 환경으로 작용했다. 대학가는 젊은이 특유의 저항 문화를 공유할 수밖에 없었다. 통기타, 포크송, 청바지, 다방, 생맥주, 당구, 장발 등 당시의 대학문화를 상징하는 단어들은 저항성에 바탕을 둔 이중적 대학문화를 드러내는 개념이었다.

학생운동 인자들은 대학 내에서 기본적으로 소수자의 입장일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저항문화 분위기를 바탕으로 자신들의 의사를 적극적 또는 은유적 방식으로 표출하면서 자신들의 문화를 학내에서 확산시키고 동조 범위를 넓히려고 노력했다. 이들은 소비적 유희적 대학축제 문화를 일면 거부하면서도, 의사 표출 공간이 폐쇄된 조건의 반작용으로 축제 공간을 자신들이 주도하는 활동공간으로 만들려고 모색했다. 쌍쌍파티가 진행되는 다른 한편에 전통문화를 민중문화로 재해석하면서 차전놀이, 씨름대회가 벌어졌고 억압적 독재정치 세대를 풍자하는 수단으로 탈춤이나 마당놀이 등이 각광을 받았다. 가상재판, 모의국회 등은 날카로운 풍자를 통해 비판적 사회의식을 표현하는 장으로서 큰 호응을 받았다. 연고전 같은 특정 학교의 축제도 유신반대 시위의 장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이처럼 1970년대의 대학은 저항문화 창출의 산실임과 동시에 소비적 상업문화나 유흥문화의 주요 시장으로서의 이질적 문화가 혼재되어 있었다. 사회에 대한 비판적 저항의식과 낭만성, 개인성이 공존하면서 융화되기도 했지만 양자가 대립되거나 서로를 경원하면서 겹도는 양상을 띠기도 했다. 당시의 대학 문화는 차분한 연구풍토가 정착되어 비판적 문제의식이 심화되는 가운데 서로 발전적으로 융화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낼 수 없었다.

이러한 상황은 강의실 밖에서 또 다른 대학문화를 만들어내는 배경으로 작용했다. 캠퍼스에 대학이 두 개 있다는 기막힌 얘기는 긴조 9호라는 시대적 상황의 산물이었다. 각 씨클이나 학회 모임에서는 각자가, 또는 연합적으로 만든 커리큘럼을 통해 강의실에서의 수업 못지않게 밤새 토론하면서 학습하는 또 하나의 영역이 만들어진 것이다. 씨클에서의 체계적 학습이 오히려 학과수업보다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중시되는 문화가 형성되었다.

이는 교수가 이끄는 강의실이 새로운 시각에서 분출하는 학생들의 비판적 에너지와 지적 욕구를 수용하지 못한 때문이기도 했다. 긴조 9호 시기는 몇몇 교수를 제외하면 교수는 학문적으로 권위가 인정받지 못하던 비극의 시대였다. 최고 지성의 전당인 대학에서 교수와 학생 사이에 기탄없고 솔직한 논의는 단절되었다. 대학이 갖추어야 할 본래의 모습을 생각할 때, 안타까움과 어두움이 짓누르는 암울한 시대였다.

긴조 9호 세대가 창출해 간 대학문화의 성과는 비판적 사회의식의 학생운동 문화가 대학가를 주도했던 1980년대에 드러났다. 그러나 이들의 문화가 갖는 한계 또한 뚜렷했다. 이는 무엇보다, 시대 상황이 강요했던 지하활동이 몸에 배었고 보도금지로 일반 국민들에게 자신들의 주장을 전하는 통로가 막힌 채 '고독한' 싸움이 지속되었던 상황에서 비롯된 대중활동 경험의 상대적 취약함 때문이었다. 투철한 정의감으로 무장하고 헌신성을 닦았지만 전투적이고 이분법적 사고가 고착되어 다양성과 유연성의 측면에서는 취약할 수밖에 없었다. 운동 주체들의 유연성은 자신의 문제의식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반응을 듣는 피드백이 존재할 때 커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긴조 9호는 자기 목소리에 대한 메아리를 들을 수 없는 딱 막힌 구조를 강요했다. 또 강의실에서의 학문탐구가 미약한 가운데 강의실 밖의 '대학'에서 의식과 투쟁을 훈련했던 시대적 상황은 생활인으로서 요구되는 실용적 지식이나 전문성을 추구하는 마인드의 취약성을 드러내기도 했다. 정치적 운동적 차원에서는 이후 필요에 따라 나서야 했던 대중정치에 적응하는 데에도 한계로 작용하기도 했다.

4) 대변화의 밑알이 된 투쟁- '서울의 봄' 과 '광주'

유신의 '심장' 은 사라졌지만, 또 다른 일단의 정치군인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려는 음모가 이어지고 있었다. 역설적이지만 197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이 갖는 한계 때문이기도 했다. 긴조 9호 세대는 그 마지막 역할로 새로운 군부정권 등장을 막기 위한 대투쟁을 꾀했다. 이는 '서울의 봄' 과 "천추의 한" 을 낳은 '서울역 회군', 그 이상의 비극일 수 없는 '광주' 로 이어졌고 이후 새로운 386세대에 의한 학생운동이 급성장하고 우리 사회의 가시적 변화를 가져오는 터전을 제공했다.

10·26 이후 1979년 말과 1980년 신학기를 전후하여 각 대학은 새롭게, 그러나 결코 마음 편하게 만끽할 수 없는 안개정국의 으스스한 봄별을 느끼면서 자율화의 봄을 맞게 되었다. 긴급조치로 제적 구속되었던 '별' 들도 다시 학교로 돌아왔고 '서울의 봄' 학생운동은 긴조 9호 세대의 문화와 강한 영향력 속에 전개되었다. 이러한 분위기에서 총학생회가 재건되었고 각 대학에서는 교내 시위와 철야농성이 계속되는 가운데 총학생회장단이 결성되었다.

그러나 '서울의 봄' 은 지하 활동의 관성이 몸에 배 공개적 대중 조직에 미숙했고 경험도 없는 가운데 지상으로 나왔던 긴조 9호 세대의 특징과 한계를 그대로 드러낸 시공간이기도 했다. 각 대학 총학생회와 그 연합체인 총학생회장단은 가두 진출을 요하는 학생대중의 요구를 수용했지만 그 이후의 상황 전개에 따라 능동적으로 통제 지도할 수 있는 형편이 못되었다.

10여 만에 이르는 유례없는 대규모로 학생들이 서울역에 집결한 것은 긴조 9호 세대 운동의 성과이기도 했다. 그러나 그 다음의 수순이나 방식을 생각할 수 없었다. 학생들에게 그 이상을 요구하는 자체가 무리일 수도 있다. 게다가 1970년대까지의 민주화운동이 학생운동 중심으로 이루어졌던 상황과 궤를 같이 하여 박정권의 탄압-흡수 양면정책에 움츠러들었던 시민들의 호응은 여전히 기대한 만큼 높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군부세력과의 대충돌로 피바다 사태를 우려해야 했던 총학생회장단의 철수 결정에 대해서는 여러 평가가 있을 수 있다. 당시의 지도부는 "우리 사회의 민주화를 10년 정도 지체시킨 과오" 였다는 자책성 평가를 하기도 한다. 반면에 "학생회장단도 사실상 흐름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이후 임시지도부를 꾸리지 못한 수준이었던 당시의 운동의 한계" 를 고려하지 않고 지도부를 싸잡아 매도하는 것에 대한 "서운함" 을 토로하기도 한다.

'서울역 회군' 이후에도 계속 시위가 이루어졌던 광주의 민중항쟁은 전남 지역 학생운동의 역량과 기층운동이 집결된 것이었다. 그리고 '광주' 는 신군부집단과 나팔수 언론에 의해 조작된 온갖 악성루머에 포위되어 고립된 가운데

대한민국의 최정예부대와 결사항전을 벌였고 결국 처참한 희생으로 마감한 채막을 내렸다.

그러나 끝난 것은 1막 일 뿐이었다. '광주'의 비극은 공포감을 불러 왔지만, 달랠 길 없는 솟구치는 울분이 미래를 향한 투쟁의 희망으로 발전했다. 그리고 1980년대의 한국 뿐 아니라 세계 민주화운동사에 길이 남을 투쟁 자산이 되어 학생운동이 급성장할 수 있는 자양분이 되었다. 1980년대 이후 학생운동을 비롯한 민주화운동의 전체적 방향과 환경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하면서 긴조 9호 세대가 고민하던 이념적 문제를 개화시키게 된 가장 큰 배경도 '광주'였다.

긴조 9호 세대는 '서울의 봄'이 쿠데타의 역풍으로 저문 이후 1980년 가을부터 길게 잡으면 1982년경까지 각 대학에서 전두환 군사정권에 대한 투쟁의 불길을 다시 지피면서 386세대의 활동 공간을 만들었다. 결국 긴조 9호 세대는 그 고유한 특징과 한계를 그대로 지닌 채 학생운동 주도그룹으로서의 역사적 역할을 마감한 것이다.

오늘날 긴조 9호 세대는 '서울의 봄'과 '광주'로 오버랩되어 통한의 원망과 희망의 투지를 동시에 가져다 준 이중적 평가 대상으로 기억되고 있다. 다만 386 세대가 제한적이거나 '승리감'을 맛볼 수 있었다면 긴조 9호 세대의 한 특징인 무명의 헌신성을 달고 선 결과라는 점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4. 맺음말 - 386 세대의 밀밭 터전을 마련한 긴급조치 9호 세대

오늘날 세계적으로도 관심 대상인 한국 민주화운동사의 큰 특징은 학생운동 출신들이 학교를 떠난 이후 사회 각 분야에서 전문 활동가로 이전하여 사회 변화를 이끄는 주도세력으로 성장해 갔다는 점에 있다. 이 여정에서 긴조 9호 세대는 일정한 운동론과 조직론에 입각한 새로운 운동 세대로서 학생운동을 통해 다진 개혁-변혁의 이상을 집단적, 조직적, 이념적으로 사회에서 실천하기 시작한 첫 세대였다. 이 세대는 4.19 세대, 6.3 세대, 민청 세대 등 개별사건으로 통칭되면서 불연속적 투쟁으로 당면 정치문제에 대한 이슈 파이팅 성격이 강했던 앞 세대와 달리 고유한 운동 문화와 이념을 캠퍼스를 뛰어 넘어 공유했던 세대였다.

1950년대 말부터 지배정책의 변화, 즉 경제개발정책을 요구한 '민주적·민족적 국민'의식의 확산에 대해 박정권은 강경 탄압과 노동력으로서의 흡수를 통한 체제내화라는 양면정책을 폈다. 그리고 민우지-야생화지 사건, 민청학련 사건-긴급조치 4호 등 '색깔론' 씌우기 공작에 이어 긴조 9호를 발표했다. 그러나 학생운동 인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 폭압적인 최악의 환경 속에서도 이전 세대와

달리 헌신성, 집단적 공동체 의식, 조직 관념을 갖고 다양한 투쟁방식을 통해 연속성, 기획성을 띤 새로운 학생운동 문화를 창출했다. 여러 형태의 씨름을 근간으로 자체학습 시스템과 조직적 투쟁 대오가 형성되었다.

해방 이후 전쟁과 오도된 이념의 홍수 속에서 살아남기에 급급했던 기성세대는 물론, 앞 세대의 운동 선배들조차 전망을 보여주지 못한 채 보수화되어 갈 때, 긴조 9호 세대는 민주화운동이 '북괴의 남침 야욕'을 부채질하고 경제성장의 장애가 된다는 유신정권의 폭정에 논리적, 실천적으로 저항하면서 변화된 사회의 기틀을 다졌다. 노동·농민 문제에 대한 천착을 통해 반독재투쟁의 내용을 변혁적 의미로 발전시켰고 노동야학, 농촌활동 등을 통해 조직적, 이념적으로 민중성을 체화하면서 현장 이전을 모색했다.

긴조 9호 시기에는 학생운동 인자들과 일반 학생들 사이에 폭압 체제에서 비롯된 투쟁력과 경험의 차이, 시대인식과 이념의 차이가 존재했다. 대학가에는 현실비판적 문화와 쾌락과 상품의 소비시장으로서의 대학문화가 공존했다. 학생운동 인자들은 대학 내에서 소수자 입장이었지만 비판적 사회의식을 담은 대학문화를 만들어갔다. 강의실 밖에서는 밤새 토론하면서 학습하는 또 하나의 대학이 형성되었다. 다른 한편 긴조 9호 세대는 당시의 기성세대가 냉소적으로 내뱉던 표현대로 바위에 계란 던지는 격으로 메아리 없는 고독한 투쟁에 급급한 세대였다. 정의감과 헌신성을 갖추었지만 전투적이고 이분법적 사고에 기울어져 다양성과 유연성이 약했고 현실생활과 대중정치 적응도가 앞 뒤 세대에 비해 떨어진다는 평을 듣는 것도 이 때문이었다.

1980년대 초의 학생운동 역량이 수와 파워 면에서 긴조 9호 세대와 비교되지 않을 만큼 급성장한 가장 큰 동인은 그 이상 잔인할 수 없었던 비극, 그러나 동시에 희망을 품게 해주었던 '광주'였고 이를 잉태한 험 서린 '서울의 봄'이었다. 승리감을 맛보거나 꿈끝 겨를조차 없던 긴조 9호 세대가 일구어 놓은 '서울의 봄'과 '광주'는 원망과 희망으로 남아 1980년대 이후 우리 사회의 역동적이고 드라마틱한 변화를 불러 온 386세대가 자라날 수 있는 터전이 되었다. 긴조 9호 세대는 그 무성한 밑밭을 가꾸기 위해, 보이지 않지만 너무나도 귀중한 밑밭의 역사적 소임을 한 것이다.